

日本における中絶政策の歴史

일본 임신중절 정책의 역사

岩本 美砂子

미에대학 명예교수

이와모토 미사코

1880 旧刑法 墮胎罪

1907 現行刑法 墮胎罪

自己墮胎罪 : 懲役1年以下

業務上墮胎罪 : 懲役3カ月~5年

1880 구(旧) 형법 타태죄

1907 현행 형법 타태죄

자기타태죄 : 징역 1년 이하

업무상타태죄 : 징역 3개월 ~ 5년

墮胎罪 타태죄(한국의 낙태죄)

1940 国民優生法

同意による優生手術・中絶規制の強化

1941 人口政策確立要綱 「産めよ殖やせよ」

1940 국민우생법

동의를 의한 우생수술·임신중절 규제 강화

1941 인구정책확립요강 “낳아라, 늘려라” 정책

戦時中の優生政策と中絶規制強化
전시 우생 정책과 임신중절 규제 강화

1948 優生保護法 (議員立法)

強制的優生手術 同意による不妊手術

強制的中絶 同意による中絶

遺伝病 ハンセン病 頻回な妊娠 (同意) 暴行による妊娠 (同意)

優生保護法指定医制度・配偶者の同意

1948 우생보호법 (의원입법)

강제 우생수술 동의에 의한 불임수술

강제 임신중절 동의에 의한 임신중절

유전병, 한센병(동의 없이)

잡은 임신, 강간에 의한 임신(동의 있음)

우생보호법 지정의제도・배우자의 동의

優生保護法制定
우생보호법 제정

搔爬手術：自由価格

1949/ 1952 優生保護法改正

同意による中絶に経済的理由を導入

地方優生保護審査会による中絶の審査廃止

소파수술： 자유가격(보험 적용이 안됨)

1949 / 1952 우생보호법 개정

동의를 의한 임신중절에 경제적 사유 추가

지방우생보호심사회에 의한 임신중절 심사 폐지

優生保護法改正
우생보호법 개정

1972 優生保護法「改正」案 国会上程

經濟的理由の削除

胎児の障害による中絶

1972 優生보호법 '개정'안 국회 상정

경제적 사유 삭제

태아의 장애를 이유로 한 임신중절

第1回 優生保護法「改正」策動

첫 번째 優生보호법 '개정' 시도

生長の家 vs 医師会・女性団体・障害者団体

1974 「改正」法案 廃案

생장의 집(生長の家) VS 의사회・여성단체・장애인단체

1974 '개정' 법안 폐기

優生保護法「改正」の推進・反対

우생보호법 '개정'에 대한 찬반 격돌

1982 生長の家に推薦された議員が、厚生大臣に 経済的理由削除への

賛成答弁をさせる

生長の家 + 自民党の多数派 vs 医師会・女性団体・障害者団体・
自民党の一部

1982

‘생장의 집’이 추천한 의원이 후생대신에게 경제적 사유 삭제에 대한 찬성
답변을 하도록 시킴.

생장의 집 + 자민당 다수파 vs 의사회・여성단체・장애인단체 + 자민당 일부

第2回 優生保護法「改正」策動

두 번째 우생보호법 ‘개악’ 시도

1980~1982 鈴木善幸内閣 森下元晴厚生大臣

⇒1982. 11 中曾根康弘内閣 林義郎厚生大臣 << 田中角栄元首相

森山真弓参議院議員

1983. 5 現状維持の決定

1980~1982 스텝키 젠코(鈴木善幸) 내각 / 모리시타 모토하루(森下元晴) 후생대신

⇒1982. 11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내각 / 하야시 요시로(林義郎) 후생대신

<<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 전 총리

모리야마 마유미(森山真弓) 참의원 의원

1983. 5 현상 유지 결정

自民党の中の力学

자민당 내의 역학 관계

1994 カイロ人口会議

1995 北京世界女性会議

DPI女性障害者ネットワークのメンバー：優生保護法を批判

1994 카이로 세계인구회의

1995 베이징 세계여성회의

DPI 여성 장애인 네트워크 멤버 : 우생보호법 비판

優生条項を取り除く外圧作戦

우생 조항을 없애기 위한 외압 작전

1996 優生条項のみの削除 ⇒ 母体保護法

審議を省略する議員立法の手法

調査・謝罪・賠償なし 被害想定：2万5千人

1996 우생 조항만 삭제 ⇒ 모체보호법

심의를 생략한 의원입법의 꼼수

조사·사죄·배상 없음.

피해자 : 2만 5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

自民・社民・さきがけ連立政権の対応

자민-사민-사키가케 연립정권의 대응

1999 低用量ピルの承認 処方箋が必要 自由価格

2011 緊急ピルの承認 // //

1999 저용량 피임약 승인. 처방전 필요. 보험 적용에서 제외.

2011 긴급(사후) 피임약 승인. // //

低用量ピルの承認・緊急ピルの承認の遅れ
저용량 피임약 승인・긴급 피임약 승인

2015 飯塚淳子 弁護士会に人権侵害救済を申し立て

2018 佐藤由美 強制優生手術賠償裁判提訴

2019 被害者一時金給付法 一人320万円

2015 이이즈카 준코(飯塚淳子), 변호사회에 인권 침해 구제 신청.

2018 사토 유미(佐藤由美), 강제 우생 수술 배상 재판 제소.

2019 피해자 일시금 지급법. 1인당 320만 엔(약 3200만 원)

旧優生保護法の強制不妊手術への訴訟

구(旧) 우생보호법 강제 불임수술에 대한 소송

2019~ 地裁の判決：優生保護法は人権侵害・憲法違反

しかし、賠償は「除斥期間」により認められない（権利侵害から20年経過）

2022 高裁の判決：優生保護法は人権侵害・憲法違反

「除斥期間」は著しく正義に反する 国は、原告に賠償せよ

2019~ 지방법원 판결：우생보호법은 인권 침해·위헌.

그러나 배상은 ‘제척기간’을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음(권리 침해로부터 20년 경과).

2022 高等법원 판결：우생보호법은 인권 침해·위헌

‘제척기간’은 현저히 정의의 이념에 반함으로 국가는 원고에게 배상을 해야 함.

**分かれた判決 国は賠償を否定
갈린 판결. 국가는 배상을 부정.**